

## 한·일 독도인식과 독도방어 DKD 모델

\* DKD(The Defense of Korea Dokdo; 대한민국 독도방어)

하대상

### I. 서론

독도는 세계 도서영유권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군사적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적인 도서영유권 분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독도관련 연구들은 주로 역사학자나 국제법학자들에 의해 대부분 역사적·국제법적 측면에서 양국의 영유 주장 논리의 타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up>1)</sup> 일본은 이미 안보법안의 정비과정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작전이 가능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sup>2)</sup> 만약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독도를 점령한다면 이는 1592년 정명가도(征明假道)의

1) 일본 측 다케시마 관련 저작물들을 검색한 결과 335건 중 역사학 자료가 46건, 국제법·국제정치 관련 자료가 62건, 총론 212건, 기타자료 15건으로 분류되었다. 한일 간 독도 관련 연구는 역사적 권원 측면과 국제법 측면에서 상호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2) 2015년 9월 19일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를 마무리했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우(愚)를 반복하는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도분쟁이라는 전쟁행위를 연구의 핵심 주제로 선정한 이유이다.

국제정치에서 미래가 아닌 현재 임박한 가장 큰 위험은 미중 간 패권경쟁의 향방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의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정점을 찍은 강대국의 함정에 빠진 중국의 불안과 초조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한다.<sup>3)</sup> 중국의 국력은 정점을 찍고 성장둔화,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인구 축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 고조 등으로 쇠락을 걱정하는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결국 쇠락을 앞둔 강대국이 패권국을 이길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아니면 없다는 불안과 초조가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이론이다.<sup>4)</sup> 미국의 지정전략가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가 펴낸 ‘위험지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장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력 도발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과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하는 등 강화된 봉쇄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전쟁게임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다. 동아시아는 미중 패권 경쟁, 영토분쟁을 통해 군비경쟁의 각축장<sup>5)</sup>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보딜레마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멈출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지만, 유사시 독도에 투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본의 증강된 군사력이 독도에 투사된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계획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sup>6)</sup> 독도 방어작

3) “정점 찍은 중국, 그래서 위험하다”, 동아일보(2022.09.0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08/115366432/1\(2022.09.1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08/115366432/1(2022.09.14.))

4) 폴 케네디 저, 이일수·김남석·황건 공역, 『강대국의 흥망』(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9), pp. 134-136.

5) The Military Balance 2021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국방비는 미국 국방비의 62%를 차지하며 병력은 전 세계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6) “軍, 日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대응 문건 만들었다”, 동아일보(2021.2.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1/105380064/1\(2022.08.19.\)](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1/105380064/1(2022.08.19.))

전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이 독도방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나 작전능력 면에서 일본의 군사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도 방어문제를 풀기 위해 영토문제는 힘의 논리라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몇 가지 이유와 전제를 설정했다. 먼저,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력충돌을 전제로 한다. 1947년부터 시작된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논쟁은 주변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두 번의 세계대전과 우크라이나전쟁 등에서 경험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 독도는 민족의 자존심이자 양보할 수 없는 상징이다. 따라서 독도 분쟁의 결과를 예측해보고 이에 대비한 방어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주제이다. 또한 영토분쟁의 마지막 해결 방법은 군사력이다. 독도 문제에서 전쟁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방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유사시 일본의 증강된 군사력이 독도에 투사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한국의 방어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작전계획을 수행할 군사적 능력은 갖춰져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쉽게도 한국의 독도방어 작전계획은 비밀에 부쳐져 있고 해군의 작전능력은 일본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방어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2019년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사건은 일본이 한국을 우방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신을 각인시키는데 충분한 경험이었다. 이를 통해 한일 간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독도분쟁의 전쟁화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넷째, 독도 문제는 영토의 전략적 가치, 일본의 현상변경 시도, 이전 전쟁경험, 민족주의 부상 등의 요인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군

사적 분쟁 또는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sup>7)</sup> 전쟁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 간 전쟁의 2/3 이상이 인접한 국가에서 발생했으며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지리적인 근접성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sup>8)</sup> 이는 독도에서 평화적 해결 가능성보다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며 우리가 현재 독도 문제에 당면한 중요한 숙제이다.

다섯째,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탈환을 위해 군사적 점령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내외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매우 정교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sup>9)</sup> 이는 일본의 군사전문지 군사연구에 발표한 것으로 2009년 “다케시마 포 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란 논문<sup>10)</sup>과 2012년 “2020년, 일본사위대의 다케시마 탈환작전”<sup>11)</sup>이란 논문이 있다. 2009년 발표한 다카이 미쓰오 논문은 나카무라 아키라 돛코대학(獨協大学) 명예교수의 “다케시마 포 폭격론”<sup>12)</sup>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검증해주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두 논문 모두 매우 정교하게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충분히 작전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 현실성, 창의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군사적 분야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가 없다. 다시 말해서 독도 방어전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방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상황이 발발했을 때를 대비한 고도의 민관군 통합전략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연구는 더욱더 필요하다.

7) North Texas대학 폴 헨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50~1990년까지 보고된 영토분쟁의 50% 이상이 미해결로 남아 있는데 ①영토의 전략적 가치, ②소수민족과 국경을 접하거나 ③민족/언어 집단을 공유하거나 ④국가가 현상변경을 시도할 때 또는 ⑤군사분쟁이 이전에 일어났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8) The Carter Center “Approaches to Solving Territorial Conflicts: Sources, Situations, Scenarios, and Suggestions”, Atlanta: 2010., pp.45-53.

9) “한일 독도 대전 벌어지면 승자는?”, 주간조선(2019.08.21.),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97>(2022.09.14.)

10) 高井三郎, 「竹島砲爆撃作戦は可能か?」, 『軍事研究』(2009. 3.), pp.28.-38.

11) 三鷹 聡, 「対潜水艦作戦が鍵だ! 日韓が選択すべき最良の手段とは? 2020年'自衛隊の竹島奪還作戦」, 『軍事研究』47号(2012. 12.), pp.28.-39.

12) 中村 榮, 「やむなし'竹島の砲爆撃」, 『月刊ウイール』(2008. 10.), pp.84.-95.

마지막으로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독도외교와 우리의 군사전략은 심각한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강한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불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 또는 분쟁으로 충돌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며 핵심은 독도방어 DKD 모델이다.

본 연구는 한일 간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주제로 하지만 실제 국가 간 무력 사용계획은 공개할 수 없는 비밀자료로 자료 수집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역시 독도방어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과 작전계획<sup>13)</sup>을 수립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독도 관련 연구 또한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전략 측면에서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sup>14)</sup> 저자의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 모델”은 독도에 군사적 위기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방어 위기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DKD 모델은 평시 회색지대 위협과 유사시 비전통적 위협, 전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sup>15)</sup>

본 연구는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독도방어를 위한 한국형 모델<sup>16)</sup>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한국의 독도 인식과 방위전략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일본의 독도 인식과 입장을 한국의 인식과 비교하여 좁혀질 수 없는 현상을 진단하였다. IV장은 독도방어 DKD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독도방어 전략과 시스템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의 무력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군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포클랜드전쟁 모델을 적용하여 전쟁단계별 군사력을 평가<sup>17)</sup>하고 대응방

13)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위기관리 매뉴얼’ 있다”, 한국경제(2006.03.1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787979\(2021.11.0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787979(2021.11.04)); “〈2012 국정감사〉버려진 독도방어 작전계획”, 유용원의 자료실(2012.10.09), [https://ben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81&num=307\(2022.09.03\)](https://ben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81&num=307(2022.09.03))

14) 일본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방안 관련 논문은 홍봉기의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와 하대성의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 모델”이 유일하다.

15)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 모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중 전시 포클랜드형 모델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16) DKD(The Defence of Korea Dokdo; 대한민국 독도방어) Model

안을 도출하여 독도방어 DKD 모델을 제시하였다. V장은 모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개선 방향과 연구과제를 적시함으로 본 논문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 II. 한국의 독도 인식과 방어전략

### 1. 독도 분쟁의 원인과 가치

독도 분쟁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과 보고서의 대부분은 역사적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와 고증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양국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양국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가이익과 가치 측면에서 독도 분쟁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첫째,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요인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역사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일 간 독도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크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지도자와 일본 교과서가 나타남으로써 한일 간 역사적 양국이 갈등의 촉매가 되고 독도는 자존심 경쟁의 표상으로 대두된 것이다.

독도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며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일본과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와

---

17) 유럽의 제대식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정태적 평가와 동태적 평가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정태적 방법에는 병력, 무기의 숫자를 비교하는 단순 정태적 평가와 무기들의 효과와 가중치를 통해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평가방법이 있다. 동태적 방법에는 전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과 입력값을 사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전투 결과를 예측해 내는 방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 정태적 평가방법과 도상 위게임 방법을 적용하여 상호 전투력 비교 및 전투의 결과를 예측하였다.

위안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없다는 강경론이 대일본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sup>18)</sup>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한국 국민들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가 아니라 일부 지식인들 사이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주변 국가와 영유권 분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독도를 이양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독도를 포기하는 것이 나쁜 선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즉 북방 4개 도서 문제,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외교적 계산이다.

한일 양국 모두 국민적 인식, 정치적 이슈, 국가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적 결단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 독도 문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독도 문제는 1946년 1월 26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SCAPIN) 제667호에 의거 미군정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sup>19)</sup>는 역사적 근거로 볼 때 미국도 독도 문제의 갈등 당사자로 볼 수 있다. 독도 문제에 있어 제3국인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한미일 안보체제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미중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강구하기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도 문제 해결에 미국이 제3자의 역할을 자처한다면 갈등을 해결로 전환하는 국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둘째, 한일 양국이 독도를 양보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가치이다. 독도 주변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으로

18)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같은 극명한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이한기, 『한국의 영토』(서울대학교, 1969), pp.227.-228. 재인용.

20)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하면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면 또는 동북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한일문제를 해결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의 구체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물고기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해류를 따라 난류성 어족과 한류성 어족이 이동하면서 독도 주변 바다에서 만나 좋은 어장을 형성하므로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sup>21)</sup> 독도가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메탄 하이드레이트<sup>22)</sup>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10조 톤이 매장되어 있고, 동해 해저에 6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독도의 해저에는 잠재적 가치가 우수한 해양 심층수<sup>23)</sup>가 존재한다. 땅 위의 물보다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300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자유로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사수하여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 자원의 확보와 보존은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방위하고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당면 과제이다.

셋째,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포기할 수 없고 독도방어는 국민적 의무라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러일전쟁 사례를 통해 지정학적으로 확인된 독도와 동해해역의 군사적 가치는 현재도 유효하다. 독도는 동해의 한 가운데 위치한 유인도로<sup>24)</sup>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는 객관적으로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 강대국으로 이들이 독도를 점유하여 동해해역에서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러일전쟁 당시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울릉도 독도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일본의 선점으로 러일전쟁에서 패해 동해해역에서 주도권을 잃는 뼈아픈 경험이 있다. 중국은 2011년 미국과의 태평양 분할론을 제기할 정도로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의 서해에 항공모함을 띄우고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는 중

21) 독도의 어장은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양분되며, 오징어의 경우 국내 전체 어획량 중에서 독도 연안과 대화퇴어장의 어획량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오리, 열어, 광어 등 잡어 어획량과 홍게, 새우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량도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어민들의 중요한 경제적 텃밭이라고 볼 수 있다.

22)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것이다.

23) 해양 심층수는 수심 200m 이하의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로 수온이 일정하고,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아 세균 번식이 없는 청정수이다.

24) 위도상 동도가 북위 37° 14' 12", 동경 131° 52' 07"(독도 삼각점 기준)에 위치하여 있고, 서도는 북위 37°, 동경 131° 51' 51"에 위치하고 있다.



국의 해양 진출 전략에 구미가 당기는 지역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와 함께 독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 독도를 군사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면 독도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북방 4개 도서 반환에 대한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 신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주장하는 국내 정치 환경하에서 독도는 북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이자 군사 전초기지<sup>25)</sup>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다.

독도를 주변국의 군사 전진기지로 빼앗긴다면 동해안의 안보는 물론 한국의 해양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도가 가지는 군사전략적 가치<sup>26)</sup>는 먼저 영토로서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하여 한국 작전 구역 및 방공식별 수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독도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접근을 조기에 경보<sup>27)</sup>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대전에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더 중요해졌다. 한국이 독도에 최신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여 대공 감시체제를 확보하고, 해저 잠수함 감시 시스템을 구비한다면 독도는 동해 및 태평양 진출을 감시하는 조기 경보 기지로서 거둬낼 수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독도는 동해안의 해상과학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 기상예보,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기지, 자원 활동 동태, 해양 오염방지 등과 같은 부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략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sup>28)</sup>로서 군사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해군의 정박기지와 어선의 긴급대피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해해역에서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sup>29)</sup>

25) 전초기지는 침략군이 남의 나라를 공격하기에 유리한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군사 기지

26) 홍성룡,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 35.-38.

27)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 당시 독도를 러시아 해군을 감시하는 정보기지로 활용하여 조기경보와 통신중계 임무를 수행하도록 운용했다. 현재에도 이러한 군사적 가치는 유효하다.

28) 배진수, “세계의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 『국제정치논총』 제38집 2호(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p.122. 참조.

## 2. 독도 방위전략

우리는 독도 문제를 독도 분쟁으로 표기할 정도로 한일 간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었다는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에 분쟁으로 볼 수 없다는 소극적 대응은 앞으로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실효적 지배의 우위를 기반으로 일본의 주장에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다. 독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허술한 대응으로 일본에 유리한 국면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는 사건이 1999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체결이다. 독도의 어로수역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하고 잠정수역화<sup>30)</sup> 하기로 한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방관한 꼴이며 독도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고 비난받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2006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강구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의 땅이며,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를 강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독도 문제는 한일 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의 독도 방위전략은 실효적 지배의 강화와 천명이다. 실효적 지배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도를 강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에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평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9) 이외에도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를 선행연구에서 많이 피력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30) 잠정수역화란 어느 나라 땅인지 당분간 보류시키자는 것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협상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비판의 역사를 말한다.

는 점을 부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주권 행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현실적 점유를 실효적 지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효적 지배 요건을 충족하고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논리 개발과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sup>31)</sup>

독도 방위전략 중 군사적 대응능력의 문제는 일본의 무력점령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수준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없다면 무력으로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1990년대 초부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매우 정밀하고 현실적인 독도 무력점령 시나리오가 논문으로 발표될 정도로 숙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대응능력 평가는 무력점령에 대비한 작전계획과 이를 수행할 군사력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작전계획은 국가적 비밀사항으로 존재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군사력 수준 또한 주변 국가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 매우 열세한 수준이다. 결국 일본의 무력점령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군사력 수준으로만 판단해 본다면 일본의 위협을 억지할 수 없으며 유사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위협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독도에 대한 방위전략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권 발효 측면에서 경찰력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다. 유사시 독도에 대한 방어작전도 경찰경비작전으로 이루어져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따라서 자위권 차원에서 최동단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배치하여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sup>32)</sup> 독도에 대한 무력도발이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은 치안적 측면에서 대응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영토 주권 수호 의지는 독도에 대한 방위전략의 개념 전환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 독도 방위전략을 경찰에 의한 치안적 개념에서 군대에 의한 영토 보존과 수호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선포해

31) 하대성, 이정태, “독도의 전략적 가치와 독도방어 전략의 특수성”, 『대한정치학회보』 제 30집 3호(대한정치학회, 2022), p.73. 참조

32) 위의 논문, p.75. 참조

야 한다. 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병력, 장비, 무기체계, 시설물 등을 보강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독도 방위전략의 딜레마와 한계

한국의 독도 방위전략은 다음과 같은 태생적 한계와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정책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먼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특수성의 문제이다. 즉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딜레마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한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독도가 유사시 타국에 의한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공격하였을 경우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우리에게 기울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요구되는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무력도발을 공개적으로 상정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둘째, 정치외교적 한계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이다. 한일 양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것이 독도 문제의 한계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독도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국가영토 일부분을 양보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결심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독도 영유권의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가 함축되어 있어 주변 국가 모두의 동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병존하고 있다.

셋째, 한일 양국 간의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으나 모든 방법론에는 극명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먼저 타협론이

다. 독도 문제는 평화적인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양국 간 양보와 타협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협상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sup>33)</sup> 다음은 점령론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수단은 무력을 동원한 해결책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독도에 대한 무력점령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독도 방위전략이 소극적 방어전략으로 군사적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적 차원에서의 독도 방위전략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현상 유지론이다. 이는 주변국들의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도 자신의 영토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당사국인 한일 양국의 입장에선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와 딜레마가 있다.

넷째,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무시라는 전략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 독도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전개될 경우 일본의 국제적 지명도와 영향력으로 인하여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역사적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한 주장을 기피 할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독도 분쟁은 장기간의 청사진을 가지고 일본이 주장해 온 모든 논리를 전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다섯째, 독도는 우리 영토의 최동단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방위전략 개념을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일 간 정치적인 측면과 동북아 주변국 간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군사적 개념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한계

33) 이성환,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 『일본문화연구』 제4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pp.312.-313. 참조.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나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 Ⅲ. 일본의 독도 인식과 입장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역사적 사실에 두고 있다. 특히 독도를 선점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영유권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고증이 불리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대응방식의 안일함을 비판적 시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sup>34)</sup>

#### 1. 일본의 인식

일본은 독도를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점거이며, 한국의 모든 조치는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이 선점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의거하여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정치외교적 선언을 해왔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일본측 주장에 의하면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역사적 자료나 지도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34) 본 장의 내용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글로 오직 일본의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일본 측 시각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객관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의 내용은 일본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화된 정형에 저자의 분석을 첨가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예를 들면 17세기 초에는 일본 정부(江戶幕府) 공인하에 울릉도에 갈 때마다 다케시마를 항법상 하나의 목표로 삼았고, 선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박지로 사용하였고 강치 나 전복 등의 어렵에 이용하였다는 고증이 있었으며 당시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역사적 주장으로는 1900년대 초 시마네 현의 오키도민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강치잡이 사업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일본은 1905년(메이지 38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고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부가 지역 대책에 등록하여 강치 사냥 허가 국유지 사용료의 징수 수입 등을 통한 주권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타국의 항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 영유권이 있었다는 하나의 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으로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선점하고 있다는 주장의 배경으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이전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면서 독도를 선점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독도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식한다. 이러한 불법 점거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35)</sup>

일본이 그동안 독도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일관되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sup>36)</sup>

35) 국제법에 반하는 이승만 라인의 일방적인 설정에 의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 한국이 일본의 일관된 항의와 일련의 행위는 국제법상 증거 힘이 부족하고 영유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다케시마 점거를 영유권 회복이며 주장하고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 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동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

36) 일본 국민들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주장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

일본인과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독도는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가장 가까운 근대사는 1952년 1월 18일 설정된 이승만 라인으로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4개월 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복귀하면서 독도는 한일 간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단초가 되었다. 한국은 독도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극도의 경계와 최고조의 반일감정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내내 이승만 라인을 넘어서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거나 역류함으로써 독도 분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승만 라인은 1965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체결된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소멸되었지만 이미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의지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이며 1990년 초<sup>37)</sup>까지 잊힌 영토로 일본인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리한 분쟁과 갈등만 남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매년 한국 정부의 묵살과 무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sup>38)</sup> 독도 문제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경험한 주변 국가들의 반일감정 등과 같은 변수가 존재하고, 한국이 선점하고 있어 분쟁 해결에 대한 더 이상의 진척 없이 90년대 초까지 한일 간 커다란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일본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었다.<sup>39)</sup>

---

식의 심도와는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국민들의 일본의 대한 인식은 일본 강점기의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주장과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은 과거사와 연계되어 있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7)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문제는 한일 양국의 실질적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38) 한국 정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기도는 사법적으로 가장하여 허위를 주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함으로써 일본의 의사를 묵살하였다.

39) 下條正男, 「歴史認識問題としての竹島問題を何故解決できないのか」, 『歴史認識問題研究』 4호(2019), pp.101.-102.



## 2. 권원 주장의 논리 및 한계

1990년대 초까지 다케시마에 대한 분쟁의 다툼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관계는 우방적 지위를 유지한 채 스무드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 등과 일본 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일본을 질타하는 이슈는 그대로 지속되어 왔으나 현재와 같이 한일관계가 최악의 정치외교 상황으로 전환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다케시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말미암아 1965년 한일 간 체결된 한일어로협정이 폐기되고 새로운 협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 주요한 계기였다. 다시 말해서 한일 양국은 독점적 수역을 설정하는 중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기 위해 한일 양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중간 지역점에 중간선을 획정하기로 되어있었다. 이러한 규정 속에 독도의 귀속 문제도 협의의 대상이 되어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협의를 통한 해결보다 불법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1996년 독도에 접안시설 구축을 시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항의를 국민의 반일감정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역 이용하여 일본의 강점기 문제 역사적 사죄 문제로 이끌어감으로써 일본이 해결하려 했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영유권 반환 시도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영토를 강탈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본의 처지를 난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정책적 미비를 자책한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역사적인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인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인들에게 독도에 대한 각성과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었다.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은 경제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 갈등 관계에서 새로운 분기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12월에 체결된 새로운 한일 어업 협정은 독도 주위 12해리를 잠정 수역'으로 지정하여 일본의 어항을 한국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일본의 어장이라는 볼 수 있는 '大和堆' 대부분도 한일 공동관리 수역으로 지정되어 한국 어선의 불법 어로를 저지하거나 강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시마네현을 비롯해 '大和堆'를 어장으로 삼던 일본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수차례 일본 정부에 진정하고 한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 100년이 되는 2005년을 계기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위한 계몽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항의가 전개됨에 따라 일본의 설 땅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1절 행사 연설을 통해 일본에 대한 견제와 함께 모든 잘못이 일본에 있다는 한국의 주장과 인식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책임지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이슈로 등장시킨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7일 역사·독도 문제를 장기적·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화된 담당 기관의 설치를 지시했고 4월 20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을 설립하였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마치무라(町村) 일본외상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시마네현에 조례 제정을 자제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는 한국에게 새로운 명분을 주었을 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한국의 영토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이 상반되게 나타났다는 점이 일본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시와 거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일본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일본과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이 맞물려 있기에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 방안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점령과 전쟁을 치른 경험으로 반일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결국, 주변 국가들 모두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어 공세적인 다케시마 정책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점을 일본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2010년 11월 당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나시르 섬(国後島)에 상륙하여 일본을 견제한 사례와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일본의 보안청 순시선을 의도적으로 충돌하여 센카쿠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사건, 2011년 5월 한국의 국회 독도수비대책 특별위원회 강창일 위원장 등 3명이 쿠나시르섬(国後島)에 상륙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영토분쟁에 대한 일본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북방 영토를 포함한 오호츠크해의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포괄적인 파트너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도 러시아의 북방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 견제카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쿠나시르섬 상륙이 일본의 센카쿠제도 문제와 북방 영토문제가 불거진 시기에 행해진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09년 9월 16일 일본에서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탄생하게된 배경도 영토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이는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한계인 동시에 딜레마다.

### 3. 한·일 인식 및 입장 차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사유를 정리한 외무성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40)</sup>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주관적이고 추

론적인 주장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객관화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한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 여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란 점을 부각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독도나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해서 울릉도 측위의 잘못에 의한 일시적 혼란이 있었지만<sup>41)</sup> 일본은 다케시마(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하여 간행된 가장 대표적인 일본지도로 1779년에 초판을 발행한 나가쿠보 아카미즈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가 있고 그의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隱岐諸島)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한 지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다케시마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보면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1840년 「일본도」(1840년)를 간행하였는데 그는 오키섬과 한반도 사이 서쪽에 다케시마<sup>42)</sup>와 송도<sup>43)</sup>라는 2개의 섬이 있었다는 것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부터 ‘아르고노트섬’, ‘다주레섬’이라는 두 개의 명칭이 나란히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지도에서는 「아르고노트섬」이 「타카시마」, 「다주레섬」이 「마츠시마(송도)」라고 기재되게 되었었고, 이러한 관계로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라고 불려 온 울릉도가 “송도”라고도 불리는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그 이후 1905년에 현재의 독도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했다. 다

40)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참조

41)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울릉도 명칭에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는 1787년 프랑스 항해가 라페루즈가 울릉도에 이르러 이를 다즐레(Dagelet)섬이라고 명명하였고,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코르넷도 울릉도를 발견하였는데 이 섬을 아르고노트(Argonaut)라고 이름 붙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라페루즈와 코르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위도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다른 2개 섬인 것처럼 기재하게 되었다.

42) 울릉도의 에도 시대의 호칭.

43) 현재의 다케시마의 에도 시대의 호칭.

시 말해서 일본 내에서는 예로부터 다케시마와 송도에 관한 지식과 그 후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섬 이름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송도를 희망했다는 일본인이 그 섬의 개척을 정부에 청원하였고 정부는 섬 이름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1880년 현지 조사를 통하여 동 민원에서 송도라고 불리는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울릉도는 송도로 통칭하게 되면서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1905년 기존의 명칭을 바꾸는 형식으로 현 독도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한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다케시마에 대한 인식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라는 섬의 실체를 인식하여 왔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한국 측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만대요람』(萬機要覽)에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라고 기술했으며, 우산도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지지』의 본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를 동일한 섬이라고 하고 있고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로부터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연구에서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이란 신빙성이 낮은 사람의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였고 또 다른 문헌인 강계고(疆界考, 1756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상의 위치와 크기가 이상한 우산도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만약 한국측이 주장대로 우산도가 독도를 나타낸다면 이 섬은 울릉도 동쪽으로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섬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고증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독도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영유권 확립의 차이점이다. 일본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도 시대 초기부터 막부 공인 아래 어부들에게 이용되고 있던 다케시마는 1618년 돗토리번 호키국 요나고의 조닌 오오타니 진키치, 무라 카와 이치베가 동번주를 통해서 막부로부터 울릉도<sup>44)</sup>(鳥取藩伯耆国米子の町人大谷甚吉`村川市兵衛は`同藩主を通じて幕府から鬱陵島) 면허를 받았으며 그 이후 양가는 매년 1회씩 울릉도로 건너가 전복 채취, 홍역 포획, 나무 벌채 등에 종사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영유권 확보의 증거로 들고 있다. 양가는 쇼군가의 아오이 무늬를 표시한 표식을 달고 울릉도에서 사냥에 종사하며 채취한 전복을 쇼군가 등에 헌상하는 것이 상례여서 일명 동도의 독점적 경영을 막부 공인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키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에 있는 독도는 항행 목표로 삼아 선박의 정박지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중반에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울릉도 귀속을 놓고 막부와 조선왕조 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1692년,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로 향하자, 조선인의 상당수가 울릉도에서 어채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1693년 오오타니 집안이 역시 다수의 조선인을 만나 안용복, 박어둔(朴於屯) 등 2명을 일본으로 데려갔다. 이 무렵 조선왕조는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막부는 대마도번(江戸시대 대조선외교무역의 창구였음)을 통해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에 송환하고 조선에 대해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울릉도 귀속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과의 우호를 고려해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당시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사실과 다른 안영복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44) 당시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를 가르킴.

을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한다는 증서(書契)를 에도 막부로부터 얻었는데 대마도 영주가 이를 탈취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에서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1693년 도일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한다는 서계를 줄 수 없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 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 방문 때 울릉도에 일본인이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69년 방문은 막부에서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일어난 사항으로 당시 오타니·무라카와 양가 모두 이 섬에 도해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안용복에 대한 한국 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금을 여기고 국외로 건너가 귀국 후에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그 진술에는 상기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이 보인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 측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1905년 이후 주장의 차이점이다. 일본은 1905년을 기점으로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했다고 본다.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에서의 강치 포획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04년 9월 내무·외무·농상무 3대신에 대해 랑코도(らんこ島)<sup>45)</sup>의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요청하였다. 요청에 따라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죽도를 오키섬청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과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적당하지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각의 결정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가 있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재확인하였다는 주장이다.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따라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독도가 “대나무 섬”으로 명명<sup>46)</sup>되었고 오키섬 소관으로 된 사실을 고시하고 당시 신문에

45) 랑코도는 다케시마의 양명 "리앙 쿠르 섬"의 속칭으로 당시 유럽의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으로 인하여 울릉도가 "송도"라고 불리는데 현재의 다케시마가 "랑코도"라 불리게 되었다.

도 게재되어 일반에게 고지되었다는 주장이다.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를 국유지 대장에 등록함과 동시에 강제 포획을 허가제로 하였으며 이후 1941년까지 계속 되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가 말하는 돌섬이 독도라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한국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를 울도라고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보냈고 이 칙령에서 울도군 관할 지역을 “울릉 전도와 돌섬”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돌섬이 지금의 독도를 가르킨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돌섬이 오늘의 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왜 돌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왜 한국 측이 독도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지, 우산도 등의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대한 의문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칙령의 공포 전후에도 한국이 독도를 효과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한국이 1951년에 독도 영유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에 제출하였으나 미국은 명백하게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미국은 러스크 극동 담당 국무부 차관보의 답변을 통해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 다뤄진 적이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독도는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점령 아래 있던 1951년 7월에도 연합국 총 사령부는 연합국 총 사령부 각서(SCAPIN) 제2160호로 다케시마를 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7월, 미군이 계속 독도를 훈련 구역으로 하고 사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일·미 행정 협정에 의거 설립된 합동 위원회는 다케시마를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은 그 뜻을 고시했다고 주장한다. 1953년 3월 합동 위원회에서 독도를 폭

46)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일 학자들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인 송도가 아니라 무주지인 랑코도로 만들고 새로 죽도라는 이름을 붙여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격 훈련 구역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일행정협정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일본 내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법 인식의 차이점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는 않겠다는 주장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법을 어기고 일방적인 평화선을 설정하여 넓은 수역에 대한 어업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그 라인 내에 독도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설정한 평화선은 공해상에서의 불법 경계이자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는 않겠다는 제안을 한국에 수차례 하였으나 이를 매번 거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한국은 불법 점유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1954년 9월부터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7)</sup> 그리고 1962년 3월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 때에도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무대신으로부터 최덕신(崔德新) 한국 외무부장관에게 본건을 ICJ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8월에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하면서 다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같은 달 한국은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sup>48)</sup>

47) ICJ 회부는 1954년 당시 미국도 한국에 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벤 플리트사의 귀국 보고에는 "미국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건을 ICJ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제의를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일본측 주장이다.

48) ICJ는 분쟁 양 당사자가 동 재판소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1958년 이래 합의 없이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제소해 왔을

## IV. 독도방어를 위한 DKD 모델

### 1. 한국군의 독도방어 전략과 시스템 상황

본 절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한국군의 독도방어 전략과 시스템은 대부분 비밀사항으로 일반인의 열람이 제한된다. 한미일 동맹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도방어에 관한 한국의 대응은 매우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계획수립의 존재 또한 공식화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중일 간의 센카쿠제도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며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켜낼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군의 독도방어 전략과 시스템은 독도방어에 참여하는 해양경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제 작 전요소를 대상으로 독도해역에서 벌어진 사례 분석을 통해 전략과 시스템은 있는지? 있다면 잘 가동되고 있는지 등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독도는 전략적 가치를 가진 도서이며 국가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도서로 전략도서로 정의할 수 있다. 주변국과의 해상분쟁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지원을 위한 핵심기지로 활용할 수 있고, 도서 인근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영토적 측면에서 주변 국가와의 영역적 충돌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제적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49)</sup>

군사적 관점에서 전략도서는 해상 접근로 확보 및 통제, 본토방어를 위한 작전중심 제공, 위협세력 분산배치 강요, 전략목표 타격 및 전략기지 제공, 해군세력의 지원기지 제공, 도서일대 방위권 감시 및 통제 등이 가능해야 한다.<sup>50)</sup> 한국군의 전략도서 방어는 서해, 남해, 동해를 잇는 U자형 전략

경우에도 ICJ의 강제적인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만약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했다고 해도 한국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ICJ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49) 하대성,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 모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21), pp.155.-156.

도서방어체계 구축을 기본개념으로 한다.<sup>51)</sup> 서해부대는 백령도·연평도지역의 서북도서부대와 남해 제주도지역의 9여단 그리고 동해 울릉도 지역의 부대배비를 통해 전략도서방어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sup>52)</sup> 이를 위해 2011년 서북도서사령부 창설, 2015년 제주도 해병 9여단을 창설하여 서해 및 남해 전략도서 방어를 위한 체계를 완성하였으나 동해 전략도서 방어를 위한 울릉도 지역 부대배비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울릉도지역 순환식 부대배비와 공세적 부대운용을 위해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울릉도 주한미군 반환부지 사용을 승인받아 해병대 전략도서방어체계 구축 여건을 조성하였고, 사동항 건설(2018년), 소형공항 건설(2020년~2025년), 항공단 창설(2021년)을 통해 울릉도·독도방어를 위한 부대운용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sup>53)</sup>

도서방어부대는 평시에는 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평시에는 위기관리 신속대응부대로 운용되어 위협을 억제하고 위기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시에는 결정적 임무수행부대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쟁 이전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울릉도·독도 방어 시스템은 제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독도에 대한 강점을 시도할 경우 울릉도 전방기지에서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독도를 먼저 점령하여 적의 강점을 거부한다. 이후 해·공군, 해병대 전력을 추가 증원하여 해상 및 공중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관리에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한다면 독도는 적의 활동을 관측, 탐지, 감시하는 전초기지로 운용하고, 울릉도는 사동항과 소형공항 등을 이용하여 제 작전요소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50) 정기영,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전략도서의 역할과 운용개념에 관한 연구”, 『전략논단』 제9호(2008), p.203

51) 해병대 “울릉부대 창설 추진...울릉도·독도 등 전략도서 방위 능력 강화”, 뉴스핌(2019. 10. 1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15000679>(2020. 3. 21.)

52) 박재형, “해병대 전략도서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략논단』, 제24호, 2016, p.95.

53) 하대성, 앞의 논문, p.157.

울릉도 전진기지 건설과 순환부대 배비 등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한국군의 독도방어 전략은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될 것이다.

한국의 독도방어 전략은 위기관리 전략과 전쟁 대비 전략으로 구분된다.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은 NSC가 주관하고 정부부처 및 해양경찰, 지자체가 담당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up>54)</sup>에 근거한다. 주로 일본의 일상적 도발과 상륙 도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다.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무단 상륙 및 영공·영해 진입 등을 “중대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이다.<sup>55)</sup> 독도 우발사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정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 독도 우발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다.<sup>56)</sup>

표준매뉴얼 시행을 위한 독도 경비대책은 독도 인근 해역 대형함정 1척과 울릉도 헬기 1대가 상시 배치되어있고 3시간 내 대형함정 2척이 증원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해군과 독도경비대가 합동작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와 포항에 배치된 함정의 출동시간은 6시간 30분 이상으로 장시간 소요되며 울릉도를 제외하고 포항과 동해에서 헬기의 출동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독도에서 임무수행은 매우 제한된다.<sup>57)</sup> 평상 시 독도 해역에 배치된 함정은 1척으로 강원도 3배 면적의 해역을 관할함으로써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상 작동하는데 제한<sup>58)</sup>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독도방어작전계획에 근거한다. 독도방어작전

54) 2004년 5월 일본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한 이후 유사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중심으로 2004년 9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55) “정부, 4~5월에 독도 ‘우발사태’ 대비 종합훈련”, 오마이뉴스(2005.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1330\(2022.07.2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1330(2022.07.20.))

56) 해양경찰청에서 독도 관련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해 독도 침입, 독도 상륙 등의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57) “독도 유사시 우리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 늦게 도착”, KBS 뉴스(2019.9.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4757&ref=A> (2022.07.20.)

58)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상민의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독도에 배치된 최대 주력함정인 동해해경 5001 경비함(5천t급)은 최근 5년여 간(2015~2020.6.) 고장으로 인해 해경 경비에 차질이 예상되는 ‘10일 이상 중정비를 받은 정비횟수’가 5차례였다. 5001 경비함은 ‘좌현 주기관 손상 개소 복구수리’, ‘축 발전기 정류기 재생수리’, ‘열상감시장비 분해 점검수리’ 등을 위해 최장 44일, 총 135일 이상 해상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의 존재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김광진의원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알려졌다.<sup>59)</sup> 존재 여부조차 합구하고 있으며 작전계획 명칭도 별도 분류한 것은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991년 독도방어작전계획을 작성하여 1996년부터 동방훈련이란 이름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했으며 지금은 독도방어훈련으로 명명하여 매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군의 독도방어 전략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비밀로 분류되어 존재조차 비밀인 작전계획은 검증할 수도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작전계획이 유사시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다. 비밀보장을 위해 소수의 전문가가 검토한 작전계획의 오류는 평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독도방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평시 위기관리를 위한 해경의 경우 함정의 노후화, 함정의 관할 담당구역 과다, 신속 대응전력의 반응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독도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일본의 독도 무력 점령 시나리오

일본의 독도 무력 점령 시나리오는 2012년 일본의 저명한 무기연구가인 미타카 사토시가 일본 군사연구 12월호에 발표한 “2020년, 일본자위대의 독도 탈환작전”<sup>60)</sup>이란 논문을 분석한 것이다. 2012년은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에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발생한 긴장으로 권력변동이 있었던 해이다. 중국은 제18차 전국대표자회의가 열리는 해로 지도부가 대거 교체되는 시점으로 당내 권력투쟁이 치열하고 한국은 12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내정통치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일본은 민주당 정권 하 내정 및 외교 양쪽 다 어색한 가운데 충분한 사전 외교적 교섭이나 준비 없이 센카쿠제도 국유화를 선언함으로써 영유권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미타카 사토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독도탈환작전을 기획하였으며 순수 군사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미타카 사토시가 주목하는 점은 일본이 2012년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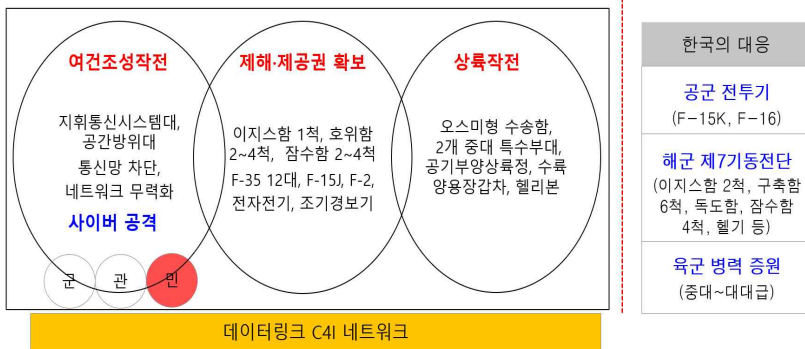
59) “김광진 독도방어 작전계획 10년째 방치”, 파이낸셜뉴스(201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738161>(2022.07.19.)

60) 三鷹 聡, 앞의 논문

연습장에서 실시한 종합화력연습의 훈련 상황이다. 작년까지는 영토에 침입하여 상륙한 적군을 격퇴하는 내용이었으나, 올해에는 종합연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도서방위를 명확하게 강조한 것이다. 해상전투를 상징하여, 해상자위대의 P-3C도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또한 2013년도 예산에 수륙양용장갑차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독도탈환을 노렸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F-35A<sup>61)</sup>의 부대 배치를 끝낼 2020년을 기점으로 제공권 확보까지 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군사행동에는 명확한 의사 및 군사능력으로 결정된다. 독도탈환작전의 시뮬레이션은 일본정부가 무력으로 섬의 영유권을 탈환하겠다는 결심과 그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군사적 능력을 가진 육·해·공 자위대에 명령하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자체가 작전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국회에서 전쟁계획을 승인하면 여건조성작전, 제해·공권 확보, 상륙작전 등 단계별 작전이 시작된다. 여건조성작전에서 주목할 사항은 데이터링크 C4I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통신망을 차단하고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사이버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2년에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민간 요소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강조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매우 전문적이고 정교하다.

〈그림 1〉 독도 탈환작전 구성



출처: 하대성,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 모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117.

61) 2018년 신대강의 계획이 완성되면 일본 보유 F-35 스텔스 전투기는 총 147기(F-35A 105rl, F-35B 42기)를 보유하게 된다.

### 1) 1단계: 여건조성작전

여건조성작전은 독도탈환을 위해 벌어질 공중 및 해상, 수중전투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적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전으로 핵심은 사이버전이다. 1990년 걸프전쟁에서 미군이 이라크의 소련식 방공시스템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사이버 공격을 하였고 200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관련 시설을 공습하였을 때 이스라엘 공군은 스텔스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군의 반격이 없었다<sup>62)</sup>는 것이다. 또한 2008년 그루지아의 남오세티아 내전에서 확인된 민간인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루지야에 대한 민간인의 사이버 공격으로 행정기관 컴퓨터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고 이에 대해 그루지야의 민간인이 대응한 사례이다. 이로써 민간인이 전쟁에 개입하는 기회가 생겼고 사이버게릴라라는 호칭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먼저 독도를 정보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본토와의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하여 레이더 등의 센서류 네트워크를 무력화 하는 것이다. 사이버게릴라의 공격도 있을 것이나 양국의 방위시스템의 능력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만의 전투로 끝날 수도 있으나 공격으로 인해 국내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쳐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매번 느끼듯, PC 네트워크에 의해 지탱되고 있고 라이프 라인의 제어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의 사이버전은 교전국의 인프라 파괴라는 도시부에 대한 전략 폭격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 2) 2단계: 제해·제공권 확보

독도에 대한 공격은 전면전이 아니라 도서탈환이라는 국지전으로 일본은 독도탈환작전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군사력에 대해, 일본이 질적으로나 양

62)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의 방공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통해 무력화함으로써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의 공군기를 탐지할 수 없었다.

적으로나 한국을 앞서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의 능력이 한국을 충분히 압도한다는 자신감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탈환작전의 목표인 독도는 면적 0.23km<sup>2</sup>의 작은 섬으로 평지도 거의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점령 확보를 위해서는 1~2개 중대 규모가 적당하며 사세보시에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서부방면 보통과 연대가 담당한다. 이 연대는 낙도대처 즉응부대로 편제되어, 연대의 약 7할 정도가 레인저 자격자이며, 수로 잠입 등 특수작전도 실행 가능한 부대이다.

독도에 2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양륙시키기 위한 수송능력은 바로 ‘오스미’형 수송함<sup>63)</sup>을 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스미’형 수송함은 LCAC 에어쿠션 양륙정을 2척을 탑재하고 330명의 인원 및 90식 전차 10량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함이다. 2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수송하기에는 오버스펙의 수송함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일본은 물자보급이나 의료지원과 같은 후방지원의 거점기능까지 생각하여 ‘오스미’형 수송함을 포함했다. ‘오스미’형 수송함 3척은 구레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후방 예비로 제1 공정단을 기간으로 하는 중대 규모의 헬리본 부대를 혼슈에 대기시켜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은 본격적인 상륙작전에 있어, 제1파는 2013년도부터 조달이 시작되는 ‘수륙 양용 전투차’로 상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스미’형 수송함을 충분하게 호위할 병력이 필요하다. 마이즈루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해상자위대의 제3호위대군<sup>64)</sup>이 담당한다. 제3호위대군에는 이지스함 2척, 4500톤급 호위함 6척이 있으며, 잠수함대는 구레기지 제1잠수대군에 9척이 배치되어 있다. 미 해군의 최신 종합 무기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이 호위의 중심이 되어, 항공기 위협이나 해상 위협에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작전 함정은 헬리콥터 탑재형을 포함해서 호위함 2~4척, 잠수함 2~4척 정도가 될

63) 일본은 1만3000t급 헬기탑재 수송함 ‘오스미’를 건조한 바 있다. 이어 2008년 SH-60J/K 대함헬기를 실을 수 있는 휴가급(16DDH) 헬기탑재 호위함(만재배수량 1만 3500t, 길이 197m, 너비 38m) 휴가와 이세 등 2척을 건조했고, 2013년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즈모급(22DDH) 경항모를 건조했다.

64) 제3호위대군은 동해를 사이에 둔 중국이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부대로 장비도 충실하며, 미확인 선박에 대한 대처나 북한의 미사일 소동에도 출동한 경험이 축적된 부대이다.



것으로 보이며, 독도탈환작전이 근해의 단기작전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급 함은 참가하지 않는다.

다음은 항공지원으로 제공권 확보의 필요성은 전투기가 등장한 이래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일본 역시 본 작전에서 많은 항공 전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 항공전의 양상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수가 아닌 능력이 뛰어난 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다고 정의한다. 일본은 주력 전투기 F-15J 201기가 배치되어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F-35 라이트닝 II 통합공격전투기(JSF)의 배치<sup>65)</sup>가 시작된다. 2020년 독도탈환작전에는 F-35 1개 비행대의 반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F-15J 또는 공격 지원으로 F-2A, 기타 전자전기, 조기경계관제기가 참가하고, 항공전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한다.<sup>66)</sup> 이를 담당하는 것은 서부 항공방면대로 제5, 제8항공단을 기간으로 한다고 한다. 제5, 제8 항공단은 모두 중국, 북한을 주시하는 영공 침범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육·해·공 전력 유닛 전체의 데이터를 링크한 C41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개개 함정이나 항공기는 네트워크로 링크된 하나의 단말로 F-35와 이지스함 등은 조기경보관제기나 지상관제시스템, 위성궤도 상의 인공위성까지 연계해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은 해상전투, 항공전투에서 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우열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력에 의한 ‘독도 봉쇄’를 선언해야 한다. 한국보다 높은 능력을 보유한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제해·공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공중작전은 F-35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한국 공군을 압도할 것이라고 평가한다.<sup>67)</sup> 이후에는 항공자위대가 상공의 CAP

65) 일본은 노후한 F-4 전투기의 후계기로 F-35A를 도입하기로 해, 2018년 1월 미사와 기지에 첫 배치해 3월부터 비행을 시작했다. 2025년까지 F-35A 총 105대, F-35B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66) 아베 내각은 2018년 가가함 등 이즈모급함을 F-35B급 수직이착륙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모로 개조하기로 결정하면서 비행갑판에 스키점프대까지 설치했다. 일본은 2023년 무렵 이즈모급 경항모에 F-35B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67) 한국 공군은 2019년 3월 F-35A 2대 인수를 시작으로 13대, 2020년 13대, 2021년에 14대를 인도받아 총 40대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의 F-35 142대 도입과 비교해 볼 때 3배

임무<sup>68)</sup>를 이행하면서 제공권을 확보하게 된다.

수중작전을 위해 해상사위대 잠수함대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운용된다. 잠수함 전력은 장비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부터 운용의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숫자 및 능력 모두 일본이 한국을 능가한다. 일본은 잠수함대의 전개를 통해 한국 해군 함정의 행동을 억제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평시에도 독도, 센카쿠제도에 상당수의 일본 잠수함대가 전개해서 초계 임무를 맡고 있다. 일반적인 해군의 특성상 수상함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항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 작전에서도 한국 해군의 수상함은 출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투지역이 좁아 전선에 투입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의 이지스함 운용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공권을 장악한 일본의 전세를 뒤집을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은 본 작전의 최대 위협을 한국 해군의 잠수함으로 판단한다. 독도 탈환을 위해 좁은 해역에 함정을 집중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함정은 미사일이나 어뢰 한 방에 격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오스미’형 수송함이 공격을 받는다면 작전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 일본의 뛰어난 대잠 능력에도 한국 잠수함의 행동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기에 일본 함대도 회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일본은 한국이 보유하는 ‘현무’<sup>69)</sup> 지대지 미사일을 고려 대상으로 뽑았다. 일본은 현무 시리즈에 탄도탄형 및 순항형이 있는데, 순항형에는 사거리 제한이 없으며, 탄도탄형도 2012년 사거리 800Km까지 인정된 점을 전제로서 일본이 사거리 내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sup>70)</sup> 그러나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공격은 지역분쟁 수준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리스크가 크다는

---

이상의 전력 차이를 보인다.

68) 일본 상공에 대한 CAP(Combat Air Patrol) 임무는 영공을 지키기 위한 공중초계임무를 뜻한다.

69) 탄도미사일 현무 2ABC는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 800km이다. 현무B 1톤을 제외하고 탄도중량은 0.5톤. 순항미사일인 현무-3ABC는 사거리 500km, 1000km, 1500km가 실전 배치됐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수량은 2016년 1월 25일, 미사일사령부에 의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SBS 단독 뉴스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1700발을 확보한 뒤 2020년까지 총 2000발을 확보한다고 보도됐다.

70) 한국의 미사일지침은 한국과 미국 간에 협의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지대지

점을 꼽아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상정한다.

### 3) 3단계: 상륙작전 전개

제해·공권이 확보되었다면, 본격적인 상륙작전이 전개된다. 일본군의 주목표는 시설이 집중된 여도이다. 몹시 좁고 가파른 험준한 지형에 한국이 설치한 방어시설도 그다지 견고하지 않아 본격적인 폭격에 도저히 견뎌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최상의 작전은 제해·공권을 확보한 시점에 봉쇄 완료를 선언하고, 섬에 있는 부대에 항복을 압박하는 농성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섬의 방어부대가 간단하게 항복할 것은 아니기에 1회전 정도의 전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상 작전이 시작되면 앞서 말한 ‘오스미’형 수송함에서 에어쿠션정 LCAC(Landing Craft Air Cushion: 공기부양상륙정) 2척에 서부방면 보통과 연대의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탑재해서 섬으로 향한다. 여기에 2013년 예산안으로 도서방어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륙양용장갑차(AAV7<sup>71)</sup> 추정)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sup>72)</sup>

주력의 상륙 지점은 여도 서부의 선박 접안시설이며 조공 부대는 독도의 지형 특성상 소수의 반 단위로 동부 암벽을 등정해 갈 수밖에 없다. 조공 부대가 동부의 암벽까지 도달하기엔 LCAC, AAV7으로는 착안이 불가하여 고무보트 등을 사용하고 ‘오스미’형 수송함에 탑재된 헬리본도 병행해야 한다. 독도는 험애한 지형으로 강습착륙에 적합한 평지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헬리본으로 전개할 수 있는 병력은 많아야 1개 소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도는 비교적 너무 작은 섬으로 어느 방향에서 침투하여도 다 보여 은밀한 침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일본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소요되는 작전 기간은 인간이 재보급 없이 저항 가능한 한계 일수인 7일에서 10일을 예상한다. 일본 측도 작전 기

71) AAV7은 미국의 수륙양용돌격장갑차로 상륙함에서 해안으로 병력을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전투 무장을 갖춘 해병을 모든 종류의 지형에서 최대 25명까지 보호·수송할 수 있다. 기관실이 완전 방수되므로 물살이 거친 항해에도 적합하다.

72) 수륙양용장갑차는 독도 지형을 생각하면 투입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본이 사용하려는 LCAC 자체가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강습상륙에는 부적절하여 일정한 장갑 및 화력이 있는 수륙양용장갑차를 사용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

간이 길어지면 물자 보급이나 구호 등의 후방 지원을 ‘오스미’형 수송함 및 본토와의 헬기수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향후 V-22 오스프리 수송기를 도입하면 일본 본토에서 대규모 공중강습이 가능해지므로 작전의 유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된다. 오스프리 항공기 도입은 2018년 수륙기동여단을 창설하면서 공중이동수단으로 오스프리 항공기 5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5월 2대가 인도된 상태이다.<sup>73)</sup>

### 3. 독도방어 DKD 모델과 실천 한계

군사적 DKD 모델은 국가의 해양관할권 문제의 범위로 일본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방어전략이다. 독도와 유사한 도서 지역분쟁 중 전쟁 수행사례를 살펴보면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전쟁이 가장 유사한 사례이다. 독도를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면 영유권 확보라는 제한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제한된 군사력을 동원한 제한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독도라는 제한된 작전지역을 고려할 때 상륙작전을 위한 지상작전부대가 포함된 특수작전으로 수행될 것이다.

포클랜드전쟁은 제한전쟁(Limited War)의 교과서적 사례이다. 또한, 현대전에서 입체적인 합동전력을 이용한 도서 탈환작전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전통적인 수상함 중심의 해군작전을 벗어나 항공기와 잠수함, 정밀유도무기, 상륙전력 등을 입체적으로 운용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양 해양관할권 분쟁에서 효과적인 방어능력은 수상전력과 수중전력, 항공전력, 상륙작전을 위한 특수작전전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포클랜드전쟁이 주는 진정한 교훈이다. 결국, 합동작전 수행역량의 발전이 독도 방어모델의 핵심이다. 따라서 포클랜드전쟁 모델을 기반으로 일본의 독도 무력 점령 시나리오에 대응한 한국의 독도방어 모델을 구상하고자 한다.

73) 2015년 5월 일본 육상자위대는 17대의 V-22B 오스프리 해외군사판매 형식의 구매를 결정했으며 중국과 센카쿠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여 다목적 이동수단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 1) 해상전투

독도를 방어하는데 투입할 수 있는 초기전력인 해군의 수상전력으로는 배수량 2,000톤에서 3,000톤급 호위함으로 구성된 해역함대가 있으며 증원 전력으로 배수량 4,000톤에서 5,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을 보유한 전단이 있으며 함대 규모의 전략기동부대도 투입이 가능하다.

한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은 동해와 서해, 남해 방어를 담당하는 3개의 해역함대(1, 2, 3함대)에서 운용하는 배수량 1,200톤급 포항급 초계함 12척과 울산급 호위함 14척(울산급 4척, 울산급 배치- I (인천급) 6척, 울산급 배치- II (대구급) 4척)<sup>74)</sup>, 배수량 3,200톤급의 광개토왕급 구축함 3척을 포함해 총 29척이다.

배치- I 인천급 호위함은 2,5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대공·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RIM-116 RAM)<sup>75)</sup>을 탑재해 탐지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신형 소나와 어뢰음향대항체계를 탑재하여 대잠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헬기 데크와 격납고를 갖춰 해상작전헬기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터렛 방식의 RIM-116은 탑재위치에 따라 표적에 대응할 수 없는 사각이 생겨 문제로 지적되었다. 배치- II 대구급 호위함<sup>76)</sup>은 2,8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배치- I 인천급 호위함의 문제점들을 보강하여 개발되었다. 터렛 방식의 RIM-116을 대신하여 해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sup>77)</sup>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에 장착하여 개발되었다. 수직발사체계를 적용하여 사격 시 사각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차기 호위함 전력화를 통해 그동안 한국 해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대공·대함 유도탄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방호능력을 보강함으로써 일

74) “해군의 허리 호위함의 무한변신...더 강력한 울산급 배치Ⅳ 개발된다”, 『서울경제』, 2021.08.04, [https://www.seaily.com/NewsView/22Q241ZHC8\(2021.11.03\)](https://www.seaily.com/NewsView/22Q241ZHC8(2021.11.03))

75) 미국 해군, 터키 해군, 독일 해군, 한국 해군, 그리스 해군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경량, 적외선 유도 대공미사일로 사거리는 10km이다.

76) 현재까지 총 4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2023년까지 추가로 4척을 인수하여 총 8척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77) 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하나로 미국의 RIM-116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개발이 완료되었다.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을 막는 유도무기로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되며 사거리는 20km로 알려져 있다.

정 부분 원해작전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향후 울산급 배치-Ⅲ(2016년~2027년)와 배치-Ⅳ(2023년~2032년) 사업을 통해 3,600톤급 6척, 4,500톤급 6척 등 총 12척이 추가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해군은 신형함 건조를 통해 구형함 대체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략기동부대는 해군의 신속대응 전력으로 2010년 2월에 창설된 제7기동전단이 있으며 배수량 4,500톤급의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배수량 7,600톤급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등 9척의 대형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8)</sup>

이에 반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총 32척의 구축함을 보유한 호위함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호위함대는 4개의 호위대군으로 구분되며 각각 8척 규모의 구축함과 각 함이 탑재한 대잠헬기 8대로 편성되어 '8함 8기' 체제를 구축하여 '88함대'라 불린다. 세부 편성을 보면 기함인 헬기구축함 1척, 방공구축함 2척, 일반구축함 5척으로 구성되어 대함, 대공, 대잠 교전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VLS 기반의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여 운용하는 구축함의 수는 헬기구축함 2척, 방공구축함 6척, 일반구축함 16척 등 총 27척으로 호위함대 전력의 75%를 차지하며 공격하는 다수의 항공기와 대함미사일에 대해 전 방향에서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사시 헬기탑재호위함 4척을 각 호위대군에 1척씩 배치함으로써 한국 해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대잠작전과 소해작전 능력은 세계 최강인 미국 해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sup>79)</sup>

일본의 “2020년, 일본 자위대의 다케시마 탈환 작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일본이 독도를 공격했다면 한국의 동해 제1함대와 일본의 마이즈루 제3호위대군이 독도해역에서 맞붙을 것이다. 그 결과는 대공·대잠 교전 능력이 부족한 한국이 일본의 대함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해의 제1함대가 가지고 있는 군함은 포항급 초계함, 울산급 호위함으로 구성되어 대공·대잠 전투능력이 제한되나 일본의 제2호위대군은 구축함 8척 가운데 6척이 수직발사장치를 갖춘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여

78) “대한민국 해군 최강의 창, 제7기동전단 경함모도 배치 예고”, 『매일경제』, 2021.12.16.,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40648/\(2021.12.13.\)](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40648/(2021.12.13.))

79) 해군전력분석평가단,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해』(2019), pp.67-69.

원해에서 생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1함대가 격렬하다면 이순신함과 세종대왕함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을 투입할 수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응해 사세보의 제2호위대군, 구레의 제4호위대군을 증원전력으로 투입한다면 한국은 수상전력의 수적 질적 열세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독도 주변의 제해권은 일본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며 일본의 독도 상륙을 위한 ‘독도 봉쇄’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수중전투

독도에서 한국이 수상전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바로 잠수함전력이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해군의 전략부대로 2015년 창설된 잠수함 사령부 예하 6개의 전대에서 운용하는 총 19척의 재래식 잠수함이 있다. 1,200톤급의 장보고급 잠수함 9척, 1,800톤급의 손원일급 잠수함 9척, 3,000톤급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1척이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다.

2001년 실전배치가 완료된 장보고급은 209급 잠수함으로 소음이 적어 항해 정숙성이 뛰어나나 잠항 기간이 3일 이내에 불과해 연안 방어 임무에 적합하다. 2020년 실전 배치가 완료된 손원일급 잠수함은 장보고급 잠수함이 가진 작전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불요 추진장치)를 탑재하여 잠항 기간을 2주에서 3주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작전지역을 연안에서 한반도 주변 대륙붕과 EEZ 내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높은 생존 가능성과 기동력을 발휘하여 공세적인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대가 실전 배치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AIP 탑재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잠수함발사유도탄(SLBM)이 탑재 가능한 수직발사체계(VLS)를 장착한 중형 잠수함이다. AIP에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도 손원일급에 비해 증가했다.<sup>80)</sup> 배치- I 은 2024년까지 2척이 전력화되어

80) “군함이야기 손원일급 잠수함, 지상표적도 정밀타격...국가전략적 비수”, 『국방일보』, 2019.09.27.,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90930/1/BBSMSTR\\_00000010206/view.do\(2021.11.10.\)](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90930/1/BBSMSTR_00000010206/view.do(2021.11.10.))

총 3척이 실전배치 완료될 계획이다.

NPT 체제하에서 핵추진잠수함의 개발, 보유가 제한되는 한국군에게 AIP 탑재 잠수함은 독도방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도산안창호급 배치-Ⅱ는 2016년부터 2029년까지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00톤급 AIP 탑재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sup>81)</sup> 3척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대는 2개 잠수대군, 제1연습잠수대 및 잠수함교육 훈련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잠수대군은 3개의 잠수대, 직할함 및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잠수함기지대로 편성되어 있다. 1개 잠수대는 2~4척의 잠수함으로 편성되어 있다. 잠수함은 소류급이라는 4,000t 규모의 잠수함을 포함해 22척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핵잠수함은 없지만 소류급은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소음이 가장 작아 공포의 잠수함이라 불린다.

냉전 시절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 소야해협에 2척, 홋카이도와 일본 본섬 사이 쓰가루해협에 2척, 대한해협에 2척의 잠수함을 배치해 16척 체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매년 1척을 퇴역시키고 새로 1척을 건조하고 있으며 잠수함 기술도 매년 발전해 함령이 평균 8년도 안 되는 첨단 잠수함으로 무장,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부터는 미국의 요청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빠지는 두 곳의 길목에 8척의 잠수함을 배치해 22척 체제로 변환되었으며 매년 1척씩을 퇴역시키지만 해체하지 않고 연습함이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운용 가능한 잠수함은 총 30척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sup>82)</sup> 이들은 모두 3,000톤급 이상으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보다 대형이며 연안뿐만 아니라 원해작전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은 AIP를 탑재한 소류급 잠수함을 2019년 기준 10척 건조했으며 2023년까지 잠수함 전력 22척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오야시오급 9척, 소류급 12척 그리고 차기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수중전력

81) 중·대형 잠수함 중 리튬이온전지를 적용해 수중작전 지속능력과 고속기동 지속시간이 늘어나고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를 개선해 표적 탐색 능력 등 잠수함의 생존성과 작전 운용 능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82) “주변국에 크게 뒤지는 한국의 잠수함 전력 보완 시급,” 『중앙일보』, 2020.3.16., <https://news.joins.com/article/23730556>(2021.3.20.)



으로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독도 공격 시 동남해의 대륙붕, EEZ 내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투입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일본의 잠수함 공격으로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작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3) 항공전투

동해안으로부터 약 22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은 포항이며 거리는 약 260km로 한국 공군의 작전반경 하에 있다. 공군의 전투기는 독도 무력 공격 시 가장 먼저 투입할 수 있는 즉응전력으로 독도방어를 위해서는 공군의 엄호하에 수상전력이 운용되어야 한다.

독도방어 시 공군의 임무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독도와 주변 상공에서 공중우세권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중우세권 달성을 통해 공군은 한국 수상전력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고 일본 잠수함을 탐지·추적·격멸하기 위해 운용되는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등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독도해역에 투입된 일본의 수상전력을 파괴 격멸하기 위한 공대함 공격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총 460여 대의 전투기 중 주력 전투기는 KF-16 134대와 F-15K 59대, F-35A 40대를 포함하여 233대이다. 가장 성능이 우수한 F-35A는 스텔스 전투기로 원거리에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추가로 F-35A 20대, F-35B 2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F-15K는 AIM-120 암람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하여 원거리에서 효과적인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거리 120km의 AGM-84 하푼미사일을 탑재하면 공대함 공격이 가능하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3개 비행대 총 320여 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기는 F-15J 150여 대, F-2 76대, F-35A 42대를 포함하여 268대이다. 공중우세권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사거리 50~100km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탑재여부가 평가기준인데 한국 공군은 이에 해당하는 기종이 KF-16과 F-15K, F-35A로 총 200여 대에 불과하나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J, F-2, F-35A 등 26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독도 무력공격 시 공중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은 일본의 77% 수준이며 공대공 작전능력은 동급으로 전력상 열세를 보인다. 그러나 공대함 능력은 한국의 전투기가 모두 100km 이상의

대함미사일을 탑재 운용할 수 있으나 일본의 전투기는 F-2 76대만이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한국 공군의 우위가 예상된다.

일본은 F-35A 63대, F-35B 42대를 포함하여 총 105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이중 F-35B 42대는 이즈모함과 가가함의 항모화 작업에 맞추어 전력화할 계획이다. 단거리 수직 이착륙(STOVL)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경항모의 개조가 완료되면 일본은 2개 항모 함대 내지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게 되어 한국 해군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포클랜드전쟁에서 증명하듯 원거리에서 발진한 영국 폭격기의 우위는 바로 공중급유기 운용에 따른 일일 출격횟수의 우위였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공중급유·수송부대 1개 비행대를 편성하여 총 4대의 미국산 KC-767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다. 추가로 1개 비행대를 신편 하여 2개 비행대를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83)</sup> 이를 통해 전투기의 작전 가용시간을 더욱더 연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공군은 2018년 11월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KC-330 1대를 필두로 2019년 12월까지 총 4대가 도입되어 2020년 7월부터 정상 운용 중이다.<sup>84)</sup> 따라서 독도 및 부근 공역에서 체공시간과 항속거리를 대폭 확대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85)</sup> 따라서 독도에서의 공중전투는 작전수행능력의 우세에 따라 승패가 결정 날 것으로 평가된다.

공중전력에 의한 공대함 전투에서는 대함미사일 탑재능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한국 공군의 우세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수상전투에서의 열세를 만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상륙전투

독도의 면적은 약 0.2km<sup>2</sup>로 매우 협소<sup>86)</sup>하여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중대급인 약 100명의 병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독도 상륙작전과 같은 정규전

83) 해군전력분석평가단, 앞의 책, p.68.

84) “공중급유기 시대 개막...독도 작전시간 3배 늘었다,” 『세계일보』, 2019.01.30,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30004556?OutUrl=naver\(2021.03.19\)](http://www.segye.com/newsView/20190130004556?OutUrl=naver(2021.03.19))

85) 독도 상공에서 공중작전은 공중급유기 도입 전 최대 30분 동안 작전이 가능하였으나 공중급유기 도입 후 작전시간은 1회 급유받을 시 1시간 늘어났다.

86) 해양수산부, 『동쪽끝 우리땅 독도』, (서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2002), p.114.

및 민간어선을 위장한 독도 상륙 등 비정규전에 대비하여 특수부대로 구성된 소규모 정예부대를 배치하여 다양한 상륙사태에 대비한 신속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독도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특수전 전력은 포항의 해병 1개 사단이다. 해병대의 수송능력은 총 5척의 상륙함이 있으며, 배수량 14,000t의 독도급 상륙모함은 700여 명의 상륙병력과 헬기 10여 대, 공기부양정 2척을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다. 유사시 기동헬기를 탑재한 독도함에서 상륙병력을 기동헬기에 탑재시켜 독도에 직접 공중기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2018년 3월 병력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으며 원거리 이격된 도서를 방어하는 전문부대로 일본판 해병대다. 2020년 현재 3개의 수륙기동연대, 약 3,000명 규모의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연대는 600~900명의 병력과 수륙양용장갑차 AAV(수륙양용장갑차)대대, 헬기강습대대, IBS(상륙 기습 고무보트) 기습침투대대 등을 편제하여 상륙작전, 기습침투, 해상침투, 정밀폭격유도, 레인지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sup>87)</sup>

2007년 창설된 4,200명 규모의 중앙즉응집단<sup>88)</sup>을 중·대형기동헬기와 공기부양정을 탑재한 이즈모함에 탑승시켜 독도 상륙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이 해상 및 공중에서 우세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독도 상륙전력의 신속한 전개에 제약을 주게 되어 일본의 독도 상륙병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탈환 작전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독도방어 DKD 모델

포클랜드전쟁 모델을 적용한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과의 대결에서 수상 전투 및 항공전투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대결에서 아르헨티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

87) “일 자위대 내년 3월 ‘해병 여단’ 수륙기동단 창설,” 뉴데일리(2017.11.0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11/01/2017110100024.html>(2021.03.19)

88) “일본 내주 ‘신속대응군’ 창설,” 『세계일보』, 2007.03.24., <http://www.segye.com/newsView/20070323000372>(2021.03.20.)

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증강이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이 2012년 연구하여 발표한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독도와 이어도 분쟁 시 주변국 해양전력의 30%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동전단 3~4개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4개 기동전단 창설에는 국방예산 22조원이 소요되고 해군병력 6,100여 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sup>89)</sup>

<그림 2> 독도방어 DKD 모델



출처: 하대성,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 모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234.

89) “이어도·독도방어에 해군 4개 기동전단 필요”, 『아시아경제』, 2012.10.0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0711193266766>(2021.11.04.)

전시 독도방어 DKD 모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방어전략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독도방어 DKD 모델의 운용을 위해 수상, 수중, 항공, 상륙 전력을 포함하는 합동전력의 증강이 절실하다.

첫째, 일본의 독도 무력공격 시 가장 먼저 투입할 초기 대응전력의 강화이다. 방호능력 보강을 위해 차기 호위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형함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전투함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도 상공에서 전투기들이 지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급유기 연료재보급 훈련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차기 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통해 공대공, 공대함 교전능력 면에서 일본의 주력 전투기들보다 나은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에 우주영역 전문부대를 새로 편성하여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우주 이용의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sup>90)</sup>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정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우주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대를 편성<sup>91)</sup>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기전투 이후 일본의 증원전력에 대한 대응전력의 확충이다. 일본은 초기전투에서 재해·공권을 효과적으로 장악하지 못할 경우 일본 서남부 해역에 위치한 해상자위대 제2, 제4 호위대군을 투입할 것이며 이는 독도에 투입된 한국의 제1함대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된다. 비록 한국군이 수상 및 공중에서 우세권을 확보할지라도 일본의 증원전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상 기동부대, 중·대형 잠수함 전력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해상전력을 거부,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의 수상 기동부대가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 2개 이상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 1개 기동전단은 독도급 상륙모함 1척,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하다.<sup>92)</sup> 구축함은 사거리 100km 이상에서 대공 교전능력을 갖추어야만 일본의 호위대군을 상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성능

90) 해군전력분석평가단, 앞의 책, p.68.

91) “한국형 3축 체계 컨트롤타워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MIDAS』, 2022. 8.,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20803203607\\_253484](http://www.yonhapmidas.com/article/220803203607_253484)(2022.09.14.)

92) 『아시아경제』, 앞의 글

방공레이더와 수직발사관 기반 함대공미사일 등을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중 최신함인 서예류성룡함에는 한국형 수직발사기(KVLS)가 탑재돼, 세계 최고 수준인 12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SPY-1D(V5)<sup>93</sup> 이지스 레이더는 최대 1,000km 밖에 있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최대 1,000개까지 탐지할 수 있다. 2028년까지 총 6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전력화하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으로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24년부터 건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차질없이 차기 구축함 사업이 마무리 되면 총 12척의 이지함을 보유함으로써 2030년대 안에 3개의 기동전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중전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산안창호급 배치-Ⅱ를 최초 작전 운용 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haracteristics)에 적합하게 차질없이 진행하고 배치-Ⅲ 또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국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차기 잠수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동남해의 대륙붕, EEZ에서 광역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증원역량을 저지, 무력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과 유사시 신속대응전력의 반응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음속이하로 비행하는 대함미사일과 달리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반응하여 함대공 요격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은 대함미사일 해성의 성능개량을 통해 초음속 공대함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sup>94</sup>한 바 있는데 이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함정 등 다양한 탑재수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 유사시 투입할 상륙전력의 반응시간 단축을 위해 독도함 이외에 상륙함을 추가 확보하여 유사시 신속대응 및 독도 탈환 작전을 수행할 수

93) 이지스 위상배열 레이더로 약 1,000여 개의 공중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고 약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94) “극초음속 미사일 등 KF-X의 국산 ‘독침’ 무기들,” 『조선일보』, 2021.03.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16/UDPPYWPUK5C3PD35N5QAPWBA Y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2021.03.21\)](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16/UDPPYWPUK5C3PD35N5QAPWBA Y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2021.03.21))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병대 예하 신속대응전담 여단을 지정해 운용함으로써 평소 훈련과 즉응태세를 갖추 수 있으며 이러한 대비가 유사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작전 반응시간 단축을 위해 울릉도에 입체적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의 주둔이 필요하다. 해역함대와 잠수함, 특수부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 건설이 요구된다. 울릉도에서 독도로 전력을 전개 시 약 2시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되며 특히 사세보나 마이즈루에서 출동하는 호위대군의 전투함보다 1시간 이상 출동반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울릉도는 동해안 해역함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독도방어 DKD 모델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쟁 확산가능성의 문제이다. 현실주의 시각으로 한일 양국은 준엄한 국가이익을 위해 전쟁도 고려할 수 있는 보통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거론되는 독도 무력 점령설은 일부 과격분자의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우리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비가 필요할 때이다.

둘째, 역사적 접근의 유보이다. 군사적 충돌을 전제로 독도 방어모델을 구상한 연구로 역사적 고증과 문헌적 자료를 중심으로 밝혀진 자료를 적시하는 작업은 유보하였다.

셋째, 주변국과 연계성 검토의 문제이다. 독도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의 분쟁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로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도 문제를 주변국의 문제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은 순수한 영토문제와 직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해역은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체제가 작동하는 지역으로 한일 양국의 문제만으로 한정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 V. 결론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일 간의 역사적, 국제법적 접근이 아닌 국제분쟁론적 접근으로 독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독도 수호를 위한 한국의 독도방어 모델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영유권을 놓고 역사적 국제법적 논쟁을 해오고 있지만 전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제가 부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제한되었다. 특히 일본의 민간연구자들에 의해 독도 침략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대응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일본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독도 문제해결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도 분쟁을 끈기 있게 국제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한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맡기자는 일본의 공명정대한 대응과 노력을 다양한 외국어로 팜플릿을 만들어 홍보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세월이 흘러 한국의 실효지배가 법적 효력을 얻어 불법점거가 합법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해결방안은 한국의 불법점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인데 실효 지배의 근거로 내세우는 한국의 막사, 포대, 레이더, 헬기장, 부두 등을 자위대의 공습, 함포사격, 미사일 포격으로 완전히 파괴 소멸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격대상은 독도 군사 시설로 한정하고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도록 무력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교섭도 조정도 거부하고 불법점거를 제재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것이며 한국은 다케시마 불법점거의 죄를 인정하고 국제조정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 무력 침공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단계별 군사적 위협을 도출하고 도상 위게임을 통해 한일 간 군사력을 분석 평가하고, 취약점에 대한 보완방향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도출한 한국의 독도방어 모델이 포클랜드형 DKD 모델이다.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후속연구를 통해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강구



하고 공포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비밀로 유지되고 통제되고 있는 독도관련 군사계획들을 공개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독도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독도 위기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인력과 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분단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정부가 일본을 공개적으로 적대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DKD 모델을 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다차원적인 일본의 도발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독도수호의 주체는 너무나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다. 이는 역으로 보면 책임성 있는 대응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과 대학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연구기관과 지원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독도위기관리 대응체제를 구축했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DKD모델이 운용되고 정책에 반영된다면 일사분란하고 실효적인 독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독도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한국영토문제 자료집』 I, II, III권.  
 경상북도 독도사료 연구소 편,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  
 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아시아분쟁현황』, 2015.  
 군사논단 10권, 편집실, 안보쟁점 시사논단 ; 독도 수호를 위한 대전략.  
 김민욱, 『해군, 해경과 합동으로 독도방어훈련 실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3.  
 김현수, 『세계도서 영유권 분쟁과 독도』, 연경문화사, 2009.  
 다케시마 문제연구소 편, 『다케시마 문제 100문 100답』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제15, 16, 19호,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이한기, 『한국의 영토』(서울대학교, 1969)  
 폴 케네디 저, 이일수·김남석·황건 공역,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9  
 해군교육사령부, 『2009 세계 해군 무기체계 발전소식』, 해군교육사령부, 2009.  
 해군본부, 『21세기 해양력을 위한 협력전략』, 전력분석평가단, 2015. 5.  
 해상안보청 편, 『해상안보백서』, 1988.  
 황재연·정경찬, 『세계 최신헌기 시리즈 5 한국해군 수상전투함』, 서울: 군사연구, 2014. 6.  
 권석민, 「독도 영유권 분쟁 고찰: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중심으로」, 해양전략연구소, 2011.  
 김연철, 「한중일 3국 해군군비경쟁에 관한 실태와 영향 연구」, 2006.  
 김용환, 하태영,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군사안보적 대비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김재엽, 「독도방어 능력의 발전방향: 포클랜드전쟁의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13.  
 김종민, 「포클랜드전쟁 교훈」, 『海洋戰略』, 제26호, 1983. 10.  
 김중하, 김재엽, 「한국 해군력 건설의 평가 및 발전방향: '대양해군' 논의를 중심으로」, 『新亞細亞』 제19권, 2012.  
 김필재, 「독도방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대상이다! 한미동맹 존속하는 한 일본의 무력행사 불가능」, 한국논단, 2014.  
 나홍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 독도의 위상(울릉도의 속도)과 그 수호책」,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박재형, 「해병대 전략도서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략논단』, 제24호, 2016.  
 배규성,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한미동맹 :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의미」, 한국보훈학회, 2017.

- , 「세계 영토분쟁의 흐름과 현황, 그리고 해결방안」, 기독교사상, 2012.
- 배진수, 「세계의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 『국제정치논총』 제38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 양길수, 「현대전에 있어서 공중우세의 중요성: 포클랜드 전쟁을 중심으로」, 『空軍評論』 제100호, 1997.
- 양영민, 『사무라이 침략근성과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 일본의 침략』.
- 유재현, 「독도와 군사안보」, 『삼參』 제28호, 2006.
- 윤형노, 「주변국 대함유도탄 개발 추세 및 시사점」, 『週刊國防論壇』 제1279호, 2009.
- 이규태, 『일본의 동해 횡단항로의 개척과 전개』.
- 이기태, 『아베정부의 군사연구와 아카데미즘: 대학의 군사연구 활성화』.
- 이선호, 「독도특집 : 한국은 독도 수호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훼손된 독도 영유권의 실상을 중심으로」,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8.
- 이성환,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 :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013.
- 이신성, 「獨島の 國家領域的 價値에 관한 研究: 韓·日 兩國간의 立場을 中心으로」, 『海洋戰略』 제73호(1991. 12).
- 이용웅, 「현대해전 분석을 통한 장차전 대응방향 연구」, 『海洋戰略論叢』 제7집 (2006, 3).
- 이정태, 「남사군도 영토분쟁과 중국의 대응」, 『선주논총』 2002.
- , 「중·일 해양영토분쟁과 중국의 대응」, 『대한정치학회』, 2005.
- 임덕순, 「독도의 정치지리학적 고찰」, 『부산교육대학 연구보고』 제8권 1호, 1972년 6월.
- 정기영,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전략도서의 역할과 운용개념에 관한 연구」, 『전략논단』 제9호(2008).
- 정남기, 「포클랜드 전훈분석: 지상전투를 중심으로」, 『軍事發展』 제48호 (1988. 6).
- 제성호,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과 국제법」, 『저스티스』 제93호 (2006. 8), pp.189-93.
- 조영갑,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학의 정립』, 2005.
- 하대성, 이정태, 「독도의 전략적 가치와 독도방어 전략의 특수성」, 『대한정치학회보』 제30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22.
- 하대성,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 모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 하태영,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군사안보적 대비방향: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을 통해서 본 한국의 정책적 대비를 중심으로」, 서울: 국방과학연구소, 『최근 주변국 해군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5.

### 314 환동해의 중심 울릉도·독도

김용환, 「최근 주변국 해양력과 한국의 대응방향: 해군력의 증강방향과 함정과 학기술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2015.

홍성룡,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The Carter Center “Approaches to Solving Territorial Conflicts: Sources, Situations, Scenarios, and Suggestions” , Atlanta: 2010.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年

, 『竹島一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年

金学俊 『独島/竹島、韓国の論理』論創校, 2004年; 増訂版, 2007年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2014年

木村幹, 「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2014年

高井三郎, 「竹島砲爆撃作戦は可能か?」, 『軍事研究』(2009. 3.), pp.28-38.

三鷹 聡, 「対潜水艦作戦が鍵だ! 日韓が選択すべき最良の手段とは? 2020年`自衛隊の竹島奪還作戦」, 『軍事研究』47号(2012. 12.).

下條正男, 「歴史認識問題としての竹島問題を何故`解決できないのか」, 『歴史認識問題研究』4号(2019)